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진짜 가족이라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 하면 떠오르는 단어, 사랑 행복 나눔 감사 애증….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그 반대의 단어, 미움 증오 폭력 불행 등이 떠오른 사람들도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정의 달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얼마전 목포의 12살 중학생의 죽음은 '이런 가족도 있구나' 되돌아보게 된다. 친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의붓아버지와 살게 된 이 중학생은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사실이 알려져 살해됐다. 의붓아버지는 친모와 함께 의붓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법원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친모 유씨는 왜 살해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딸을 살해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진정 가족이라면….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일요일, 네 살 두 살배기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빚에 시달리던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한 자녀들. 경기도 시흥 일가족 자살은 34세 된 남편과 35세 된 아내, 4살 아들, 2살 딸을 각각 꼭 끌어안고 의자에 앉은 채로 사망했다. 아내는 석 달 전, 남편은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7000만원의 빚이 있었다. 이 경우, 부모는 자살이지만 자녀 둘은 타살이라고 봐야 한다. 아이를 부모가 살해한 것이다. 아이들 경우 부모에게 같이 자살하겠다고 동의를 했을 리 없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부모의 죽음에 자식을 동반시키는 것….

그런가하면 지난 4월, 23살 된 딸이 사귀는 30세 남자친구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월에 대구에서는 10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40대가 부모를 모두 살해한 사건. 10여 년 동안 치매를 앓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다 견디다 못해 노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

공식 통계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사망은 지난해 30명을 비롯해 2016년부터 매해 30명 선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한달에 3명꼴로 학대에 의해 숨진다는 '끔찍한' 수치조차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진 못한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8만 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16만4천20명 가운데 구속된 이는 겨우 1% 남짓이다. 가정폭력의 그 심각성이 아직까지 부부사이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범죄시되지 않은 사회적분위기와 낮은 처벌 수위가 문제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이면에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보여 지는 폭력보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는 가정폭력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에서는 일단 보여지는 피해위주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성폭력사건과 같은 아이러니가 가정폭력에도 존재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인 존속살해는 개인·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62명으로 2017년(39명)에 비해 59% 급증했다. 이 중 구속된 이들 역시 지난해 52명으로 전년도(36명)에 비해 44.4% 늘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존속 대상 범죄율이 높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는 전체 살해사건에서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인 반면 한국은 약 6% 전후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 825건 중 존속살해는 48건으로 5.8%를 차지했다. 살인뿐 아니라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 존속 대상 폭력범죄도 매년 2천건 가량이 발생한다. 범행 동기로는 가해자의 정신이상이나 피해자의 학대 모욕, 가정불화, 물질적 욕구, 음주 등이 꼽힌다.

존속살해와 같은 패륜범죄가 많아진다는 건 가정과 사회가 개인에게 안식처나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4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특히 보완 개선이 시급한 영역에 대한 주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늦었지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 및 자립지원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대책들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유지, 임치조치로 가해자 상담 신설 등의 정책은 가정폭력을 상담을 통한 성행교정이 가능한 행위로 접근하고 있어 결국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문제다. 가족의 이름으로 일상화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은 없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오죽했으면 살인자 아버지를 '차라리 사형시켜달라'는 딸들의 절규가 있겠는가.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고 2013년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공권력의 보호는 먼 얘기였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 경제적 이유로, 또는 보복이 두려워 말 못 하는 가정폭력이 너무 많다.

위기의 가정, 위험한 가족, 이웃 공동체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때다. 작은 불씨를 막지 못해 큰 사건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칼럼

나 주 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수요자중심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재인정부는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과 같은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당면한 국가적 과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현재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고, 국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된 만큼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작년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균특법의 완결성을 높혀서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정책수요를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초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해 사람, 공간, 산업의 3대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하고 균형잡힌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균형발전 지원 체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추진,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본격전인 추진,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원차등지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지원체계의 관점에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광주지역에서는 인공지능중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4천억원)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특성화사업의 기반구축에 대한 R&D투자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자체간 협의 및 조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 확충은 생활SOC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광주지역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공기정화 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생활밀착형 SOC로 광산구에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가 조성되고, 공기정화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주체 활동을 결집해 지역 주도의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시·도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혁신융합단지 지정 및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경제시책 운영체계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혁신기관 간에 연계 및 협력과 지역혁신 정책 및 성공 사례의 발굴과 홍보하는 역할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매개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광주지역에도 작년 10월에 지역혁신협의회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요자중심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지역혁신협의회의 내부의 역량을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하반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고, 올해 초에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의 실행관점에서 보면 올해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작년에 균형발정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고.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통해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지역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역혁신의 씨앗이 지역 잠재력에 기초한 자양분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역혁신체계를 형성해 주체적인 노력과 함께 과실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요자인 아래로부터의 지역혁신활동은 필수적이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지역혁신체계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있어 지역의 수요자인 산학연민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 지역혁신체계를 만들어 아래로부터 지역혁신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독자투고

사고 유발 '위험한 무기' 오토바이 법규 지켜야

오토바이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반드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앙선 침범, 보도통행, 안전모미착용, 지그재그 운전,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으로 인해 본인 생명은 물론 타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어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귀중한 생명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도로 문화 질서의 현 실태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 실례로 외국인들이 봤을때 오토바이는 눈앞에 바로 들어온다.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업적인 이익을 버리고 교통법규 준수하며 안전운전하는 올바른 오토바이 운전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어 교통안전문화의 위상을 읽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죽음을 부르는 오토바이 사고의 심각성을 완전 타파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중단속 실시 및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문화를 어느정도 개선하였으나 현재 '머리가 아프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핑계삼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운전하는 모습을 일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우선 답답함을 피하기 위해 생명지킴이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이다.

분명 교통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발생을 하곤한다. 그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앗아가는 일이 없고, 오토바이 안전운전 문화가 완전 정착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하며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한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社 說

한국당,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5·18 39주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 14일 공식 출범했어야 하는 데 8개월째 허송세월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이후 30여 년간 풀지 못한 집단발포 명령체계, 시민학살 경위, 행방불명자 신원·규모·암매장 장소, 군이 자행한 성범죄 진상 등을 밝혀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현장조사,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보한 60만쪽 상당 군 자료 재검토 등 향후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진작 위원 위촉을 마치고 지금쯤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4명씩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중 2명의 부적격 문제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법 시행 8개월이 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에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결격인사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외면한 채 응하지 않고 있다.

5·18 진상규명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5·18 진상규명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의식을 갖고 진상규명위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위원 위촉을 서둘러 마무리해 5월 18일이 오기 전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한국당 3인방'이 광주시민들에게 안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잦은 계획수정 우려된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중구난방식 추진으로 인해 자칫 정부 지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타 사업과 중첩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1단계로 123만평(407만1천㎡) 규모의 빛그린산단과 43만평141만8천㎡) 규모의 에너지밸리 산단을, 2단계로 광주공항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의 인공지능(AI) 관련 미래산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공기산업과 관련해 LG전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115만평(379만7천㎡) 규모의 첨단3지구와 36만평(117만8천㎡) 규모의 평동3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3지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이 중첩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혁신성장 위주로 바뀌면서 사업 계획을 확대·수정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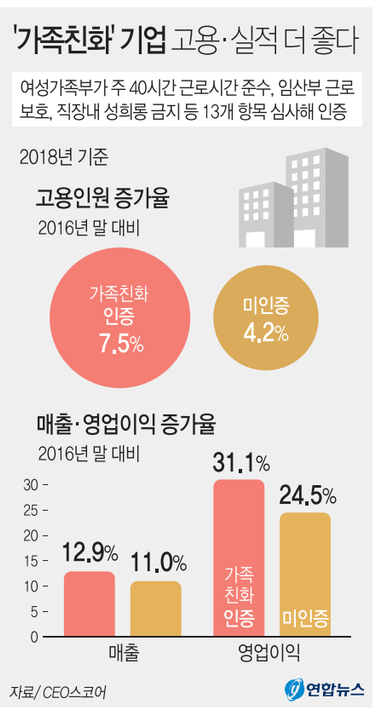
경제특구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조세감면, 산업입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의료기관,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골프장 내 고급주택단지의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노동관련 규제 완화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용역과정에서 대상지역 및 규모의 적정성, 단지별 특화산업 유치전략,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이 치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그래픽 뉴스

'가족친화' 기업이 고용·실적도 '모범'…2년새 고용 7.5%↑



임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가족친화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영 실적 등에서도 모범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족친화 기업이란 여성가족부가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 보호,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육아휴직 제도 등 13개 항목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이를 획득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 3년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148개 기업의 지난해말 기준 고용 인원은 총 90만7천771명으로, 지난 2016년 말보다 7.5%(6만3천370명)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299곳의 임직원 수는 총 59만2천226명으로, 2년 전보다 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2년 사이에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 미인증 기업이 96개에 달한 데 비해 인증 기업은 3분의 1 수준인 35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 기업 가운데 CJ CGV의 경우 2년 만에 고용이 무려 378.8%나 증가했으며 ▲한국마사회(176.0%) ▲SPC삼립(107.4%) ▲CJ프레시웨이(102.6%) 등도 세자릿수의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